

# 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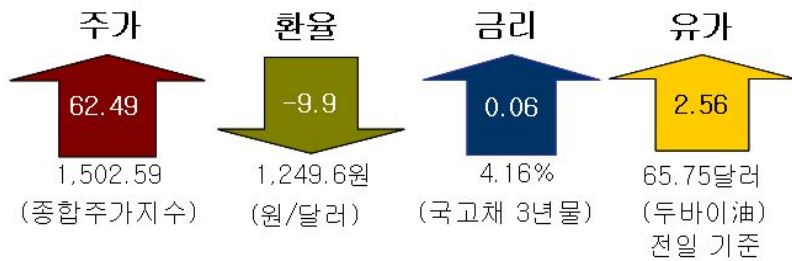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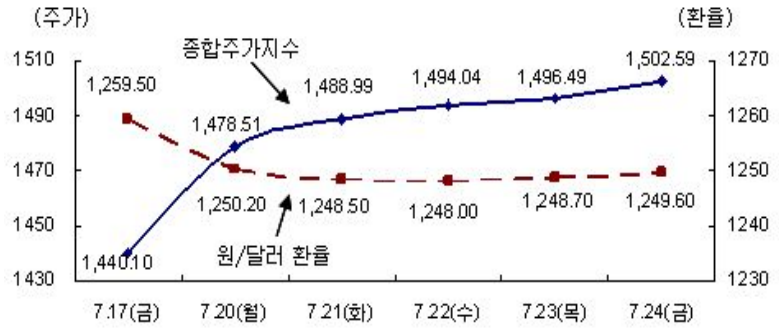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 일본 국가재정 악화의 교훈  
- 한일간 유사점과 대책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7.17~7.24)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일본 국가재정 악화의 교훈 - 한일간 유사점과 대책	1
주요 국내외 경제 지표	15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실 물 경 제 실   : 정 유 훈 선임 연구 원 (3669-4014, youhun@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일본 국가 재정 악화의 교훈

#### - 한일 간 유사점과 대책

**(일본 국가 재정 악화)** 일본은 재정 적자의 누증에 따른 국가 채무의 급격한 팽창으로 주요 선진국 중 최악의 재정 상태에 놓여 있다. 장기 불황에 따른 재정 적자는 1999년 41.8조엔으로 10년간 4.5배 이상 확대되었고, **2009년 3월말 현재 일본의 국가 채무(일본 재무성 발표)는 778조엔으로 이는 GDP 대비 148%**에 이르러 선진국 중 최고인 상태다. **일본 국가 채무 잔고는 일본 국민 1인당 609.3만엔에 해당되고, 이는 1년이상 근속근로자의 평균 연소득(2006년 기준) 435만엔의 1.4배**에 달해 재정의 장기 유지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일 간의 유사점)** 일본의 국가 재정 악화 과정을 한국도 답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1) 재정 지출의 급속 증가에 의한 국가채무의 누증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1991년 일본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9.4%였으나, 2000년에는 135.4%로 71.3%p 상승했다. 그 결과 91년에는 OECD 평균 59.4% 보다 4.7%p 높았으나 2000 년은 OECD 평균 68.7%보다 66.7%p나 높아졌다 한국의 국채채무 역시 급증하고 있다 1997 년 60조원에서 2009년 366조원(추정치)으로 6배 이상 급증하였고, GDP대비 비율은 12.3%에서 35.6%로 급증하였다.

**2)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사회보장비 지출의 지속적 증가이다.** 일본의 GDP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은 1990년 11.4%에서 2005년 18.6%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사회복지비 지출도 2001년 48.4조원으로 GDP대비 7.8%에서 2005년에는 73.3조원으로 GDP대비 9.1%로 급증하였다.

**3) 급격한 감세 조치에 따른 세수 위축이다.** 일본은 1990년대 소득세에 대한 특별감세조치와 정률감세조치를 취하여 법인세율은 37.5%에서 30.0%까지 인하하는 대대적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세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한국도 경기 침체기

에 감세로 인한 세수 축소 가능성이 높다.

**4) 국채발행 누증에 따른 금융 불안**이다. 금리 변동에 따르는 다량의 국채를 보유한 금융기관의 자산 손실 우려가 크다. 일본 국채 잔고 중 일본 금융기관의 보유액은 2008년 말 현재 500조엔으로 78.4%에 달한다. 장기금리가 4% 전후로 상승하면 일본 금융기관은 약 10조엔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였다. 2009년 상반기 한국 국채의 투자자별 순매수 비중은 금융기관과 연기금/공제회가 각각 전체의 53.2%, 33.8%를 점하고 있다.

**5) 중앙 재정 악화로 지방 재정도 파탄**에 이르고 있다. 일본 지방 재정은 세입보다 큰 세출 구조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등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도 지방 재정의 자립도가 취약하여 중앙 재정 악화로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 한국의 지방 재정의 자립도는 세수부족으로 계속 하락하여 2004년 57.2%에서 2009년 53.6%로 하락하였다.

**6) 일본의 경우, 지속적인 재정 지출 증대가 경기 부양 효과를 약화**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역시 재정에 기초한 경기 부양책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7) 일본의 재정 악화는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세대간 재정 부담에 관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도 고령화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국가 재정이 악화될 경우에 세대간 갈등이 조성될 수 있다.

**(대응책)** 일본 사례는 정부 재정만으로는 경기 활성화가 어렵고 재정 악화만 초래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정부재정을 통한 경기 활성화 정책을 당분간 지속하되 민간경제 활성화 정책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명시적인 중장기적 관리 목표 수준의 설정**해야 한다. 둘째,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셋째, 지하 경제에 대한 세원 확보 등으로 **국가 세원을 확충**해야 한다. 넷째, 국가 채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채 시장 육성**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재정 자립도 제고해야 한다. 여섯째, **기업투자 증대를 통한 민간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 < 일본 국가 재정 악화의 교훈 >

일본 국가 재정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적자 누적 : 재정 적자가 1990년 9.2조, 1999년 41.8조엔으로 4.5배 이상 확대</li> <li>- 국가채무 급증 : 국가채무 잔고는 778조엔으로 이는 GDP대비 148%로 선진국 중 최고</li> <li>- 재정의 장기유지 가능성 우려 : 일본의 국민 1 인당 국가채무액은 609.3 만엔으로 1년 이상 근속근로자의 평균 연소득 435만엔의 1.4배에 달함</li> </ul>

일본 국가채무 급증에서 나타난 특징	
구 분	내 용
재정지출의 급속 증가	- 경기 부양책 증가로 재정지출이 2000년 89.3조엔으로 1990년 대비 28.8% 증가
사회보장비 지출의 지속적 증가	- GDP 대비 사회보장비 비율이 1990년 11.4%에서 2005년 18.6%로 지속증가
국가채무의 누증	-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율은 1991년 64.1%에서 2000년 135.4%로 71.3%p 증가
급격한 감세 조치에 따른 세수 위축	- 1990년대 감세 조치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수 감소 · 소득세는 1991년 26.7조엔, 1999년 15.4조엔까지 감소 · 법인세는 1989년 19조엔, 1999년 10.8조엔까지 감소
경기부양 효과 감소	- 재정 지출의 확대에 따른 실질GDP의 상승효과가 감소 · 재정승수는 1994년의 1.21%에서 2003년 1.00%까지 하락
국채발행 누증에 따른 금융 불안	- 금리변동에 의해 국채 보유 금융기관의 자산 손실 우려
지방 재정 파탄	-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의존적인 재정구조로 지방재정 악화
세대간 갈등 심화	- 사회보장비 등에 따른 수익-부담 갭이 확대 · 일본의 세대간 생애순수익은 장래세대가 -4,585만엔인데 반해 60세 이상은 4,875만엔에 달함

시사점과 대책	
국가채무 규모의 관리 목표 수준 설정	- 국내 경기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확충, 복지수요 증대 요인 등을 감안하여 설정
재정 운용의 효율성 증대	- 불요불급하며 시혜적인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
국가 세원 확충	- 지하 경제에 대한 세원 확보 노력 등 세원 확충
국채 시장 육성	-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를 위한 국채시장의 선진화 도모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특화 산업 육성,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 강화 등으로 지방자치체의 재정 자립도를 향상
민간 경제 활성화	- 투자 여건의 지속적 개선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

## 1. 일본 국가 재정 악화

- 일본은 재정 적자의 누증에 따른 국가 채무의 급격한 팽창으로 주요 선진국 중 최악의 재정 상태에 놓여 있음
  - (재정 적자 누적) 1990년 버블 붕괴 이후 빈번한 재정 동원으로 재정 적자가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
    - 장기 불황에 따른 재정 적자는 1990년 9.2조에서 1999년 41.8조엔으로 4.5배 이상 확대됨
    - 2000년 이후 재정적자 규모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08년 현재 29.5조엔의 재정 적자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적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함
  - (채무 증가) 2009년 3월말 현재 일본의 국가 채무는 세계 최악인 상태임
    - 2009년 3월 말 현재 일본 재무성 발표 기준으로 일본의 중앙 및 지방 정부 합계 장기 채무 잔고는 778조엔으로 이는 GDP 대비 148%에 이르러 선진국 중 최고임
    - OECD 자료<sup>1)</sup>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일본의 국가 채무는 GDP대비 172.1%에 이르고, 이는 미국의 71.7%, 한국의 25.2%, 영국의 57.0%에 비해 2.4배에서 6.8배에 이르는 수준임
  - (재정의 장기 유지 가능성 우려) 장기간에 걸친 재정 적자 상태의 지속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 재정의 장기적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함
    - 일본 국가 채무 잔고 778조엔은 일본의 총인구로 나누면 일본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609.3만엔에 해당됨
    - 특히, 일본의 국민 1인당 국가채무액은 1년이상 근속근로자의 평균 연소득 (2006년 기준) 435만엔<sup>2)</sup>의 1.4배에 달해 재정의 장기 유지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1) OECD(2009), *economic Outlook No. 85*.

2) 日本 國稅廳, 「民間給与實態統計調査」, [www.nta.go.jp](http://www.nta.go.jp).

## 2. 일본 국가 채무 급증에서 나타난 특징

○ (재정 지출의 급속 증가) 일본은 90년대에 들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이 급속히 증가함

### - 재정 지출 급속 증가

- 일반회계 세출이 1983년 50.6조엔을 기록한 후, 1991년에는 70조엔을 넘어서 70.5조엔을 기록하여 1983년 대비 39%까지 증가함
- 1990년대에는 잦은 경기부양책으로 2000년에는 89.3조엔에 달하여 1990년 대비 28.8%까지 증가함

### - 경기 부양책 지속

- 1990년 버블 경제 붕괴 후, 1996년과 1997년을 제외한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총 118.6조엔에 이르는 경기 부양책을 실시함
- 특히, 1998년에는 연간 최대 규모인 40.6조엔을 경기부양책을 위해 지출하였고, 이는 GDP 대비 7.8%에 이르는 규모임
- 이에 따라, 공공투자 지출<sup>3)</sup>은 1980년대(1983~1990년)는 연평균 -1.8%였으나, 1990년대(1991~2000년)에는 연평균 4.9%로 급속히 증가함

### < 일본의 경기 부양책 규모 >

(단위: 조엔,%)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세출규모 (일반회계기준)	75.1	73.6	75.9	78.8	78.5	84.4	89.0	89.3
경기부양규모(A)	19.2	15.3	14.2	-	-	40.6	18.1	11.0
(A)/GDP*100(%)	4.0	3.1	2.9	-	-	7.8	3.5	2.1

자료 : 財務省, 內閣府, 日本經濟新聞社 『ゼミナール日本經濟入門2002年度版』.

3) 日本銀行, <http://www.stat-search.boj.or.jp/index.html>.

○ (사회보장비 지출의 급속한 증가) 급속도로 진행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지출이 급증하여 세출 억제가 어려운 구조로 변화됨

- 고령화 급속 진전

- 고령화율(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205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sup>4)</sup>
- 일본의 고령화율은 1990년 12.1%에서 2005년 20.1%까지 상승하였고, 2050년까지 39.6%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
- 특히,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주 노동 연령층인 20~64세까지의 인구 비율은 2000년, 2025년, 2050년 각각 3.6명, 1.8명, 1.2명까지 감소할 전망
-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 속도<sup>5)</sup>를 보면, 프랑스, 미국, 독일이 각각 154년, 94년, 77년인데 반해, 일본은 36년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

- 사회보장비 지출의 증가

-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사회보장비 지출이 누증하여 재정 악화를 심화시킴
- 일본의 GDP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은 1990년 11.4%, 1995년 14.3%, 2000년 16.5%에서 2005년 18.6%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일본의 고령화율 및 사회보장비 지출 추이 >

(%)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고령화율	12.1	14.6	17.4	18.0	18.5	19.0	19.5	20.2
GDP대비 사회보장비 지출비율	11.4	14.3	16.5	17.4	17.8	18.1	18.2	18.6

자료 : 日本總務省, 「日本の將來推計人口」,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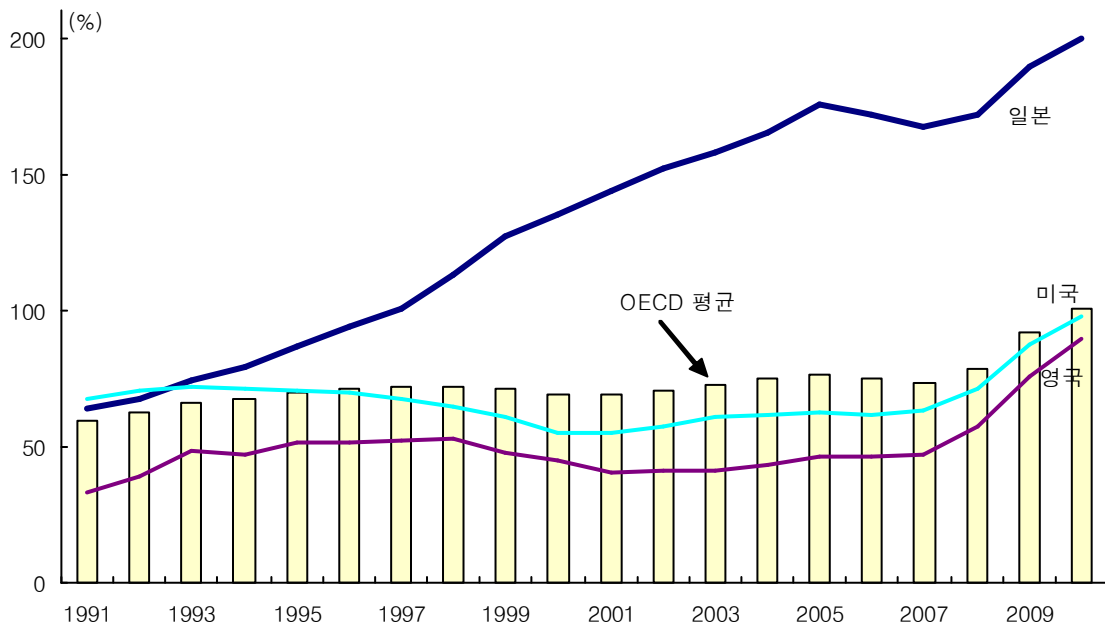
주 : 고령화율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말함.

4) 日本 總務省, 「日本の將來推計人口」,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06.

5)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데 걸린 연수.

- (국가 채무 누증)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재정적자 누적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
- 80년대까지 일본 국가 채무는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무름
    - 1991년 OECD국가 평균 국가 채무는 GDP 대비 59.4%였고, 일본은 4.7%p 높은 64.1%에 불과하였음
    - 동년 미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는 67.7%로 일본보다 오히려 높았음
  - 90년대 이후 국가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2월 말 일본 국가 채무(정부보증채무는 제외)는 522조엔에 달함
    - OECD 자료에 따르면, 90년대(1991-2000)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율은 1991년 64.1%에서 2000년 135.4%로 71.3%p 증가함
    - 반면, 1991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평균 59.4%에서 2000년 68.7%로 9.3%p 증가하는데 그침
    - 동기간 미국의 경우, 67.7%에서 55.2%로 12.5%p 감소하였고, 영국은 32.8%에서 45.1%로 12.3%p 증가

< 주요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추이 >



자료 : OECD(2009), *economic Outlook No. 85*.

○ (급격한 감세 조치에 따른 세수 위축) 1990년대 대대적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 1990년대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 조치 대대적으로 단행

- 1994년, 1998년 각각 소득세에 대한 특별감세조치, 1999년에는 소득세의 정률감세 조치가 이루어짐
- 1998년에는 법인세율을 37.5%에서 34.5%까지 인하하였고, 1999년에는 다시 30.0%까지 인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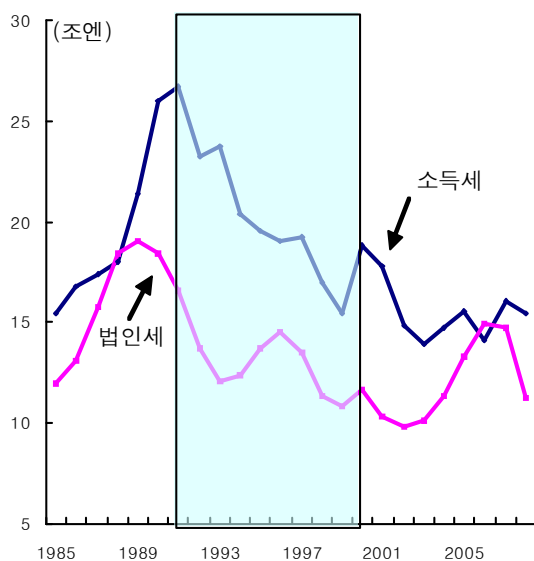
- 1990년대 세수 급감

- 일본이 장기 침체에 들어가면서 90년대 줄곧 세수가 감소
- 소득세는 1991년 26.7조엔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면서 1999년에는 15.4조엔까지 떨어짐
- 법인세는 1989년 19조엔에 이르렀으나, 1999년에는 10.8조엔까지 감소하였고, 2003년에는 9.8조엔까지 하락하여 1989년의 1/2수준에 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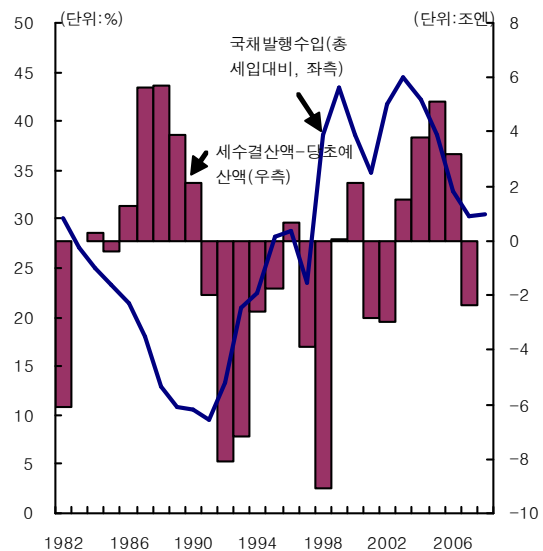
- 국채 발행의 급증

- 감세조치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는 국채발행으로 이어짐
- 세입 중 세수 부족분인 국채발행 수입은 1991년 GDP대비 9.5%(6.7조엔)에서 1999년 43.4%(38.6조엔)까지 증가

< 주요 조세 수입 내역 추이 >



< 세수감소에 따른 국채발행추이 >



자료 : 日本財務省.

○ (경기부양 효과의 감소<sup>6)</sup>) 일본의 재정 지출의 확대에 따른 실질GDP의 상승 효과가 감소

- 재정지출 효과(재정승수)의 추세적 감소

- 단기일본경제거시계량모델<sup>7)</sup>에 따르면, 실질공적투자 확대에 따른 실질GDP에 대한 승수효과<sup>8)</sup>는 1994년의 1.21%에서 2003년 1.00%까지 하락함

- 재정지출의 효율적 투자 실패<sup>9)</sup>

- 경기부양책이 정치적 고려 등으로 주로 공공투자에 많이 배분되었고, 지역적으로도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경기부양효과가 반감함
- 대표적인 비효율적 국책사업의 예로는 혼슈와 시코쿠를 잇는 연육교 사업으로 두 섬을 잇는 교량 세 개를 건설하였으나, 1999년 건설비용에 따른 이자비용이 1,487억엔에 통행요금수입은 885억엔에 불과하였음
- 또한, 니가타현의 포장도로 사업은 폭설에 대비한 히터시설까지 갖춘 최신식 도로 건설되었으나 교통량은 거의 전무함

- 재정승수 하락의 경제적 원인<sup>10)</sup>

- 일본 국민의 한계소비성향이 저하한 것에도 요인이 있겠으나, 확대 재정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이 저축을 더욱 늘리게 해 소비지출로 이어지지 않는 리카도등가원리(Ricardian Equivalence)<sup>11)</sup>가 작용
- 재정 지출 증가에 따른 구축효과로 인해 설비투자의 위축으로 재정승수가 하락하는 멘델플레밍 효과<sup>12)</sup>도 그 원인임
- 그 외에도 조세부담율(세율) 상승과 소득증가에 따른 한계수입성향의 상승

6)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

7) 단기일본경제거시계량모델은 1998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08년에 內閣府 經濟社會總合研究所의 「短期日本經濟マクロ計量モデル(각년도)」에서 발표된 것을 참조.

8) 재정 승수(multiplier)는 재정변수를 1% 증가시켰을 때, GDP가 몇%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계수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재정지출을 1조원 증가시켰을 때, GDP가 2조원 증가했다면, 재정 승수는 '2'가 됨.

9) 현대경제연구원, '일본경제유동성함정의교훈', 「경제주평」 2009.2.9. 에서 재인용.

10) 林宜嗣(1997) 『財政危機の經濟學』 日本評論社、井堀利宏(2000) 『財政赤字の正しい考え方』 東洋經濟新報社. 을 참조바람.

11) 리카도등가원리란, 정부가 적자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장차 정부가 누적되고 있는 채무를 갚기 위해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현재의 재정 적자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축을 늘린다는 것임. (『맨큐의 경제학』 (2001) 참조)

12) 멘델플레밍 효과는 금융정책은 변화를 주지않고, 재정정책을 사용할 경우, 금리 상승에 의한 설비투자의 위축과 자국통화 가치의 상승에 따른 순수출의 감소로 재정 지출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말함.

○ (국채발행 누증에 따른 금융 불안) 금리 변동에 따르는 다량의 국채를 보유한 금융기관의 자산 손실 우려가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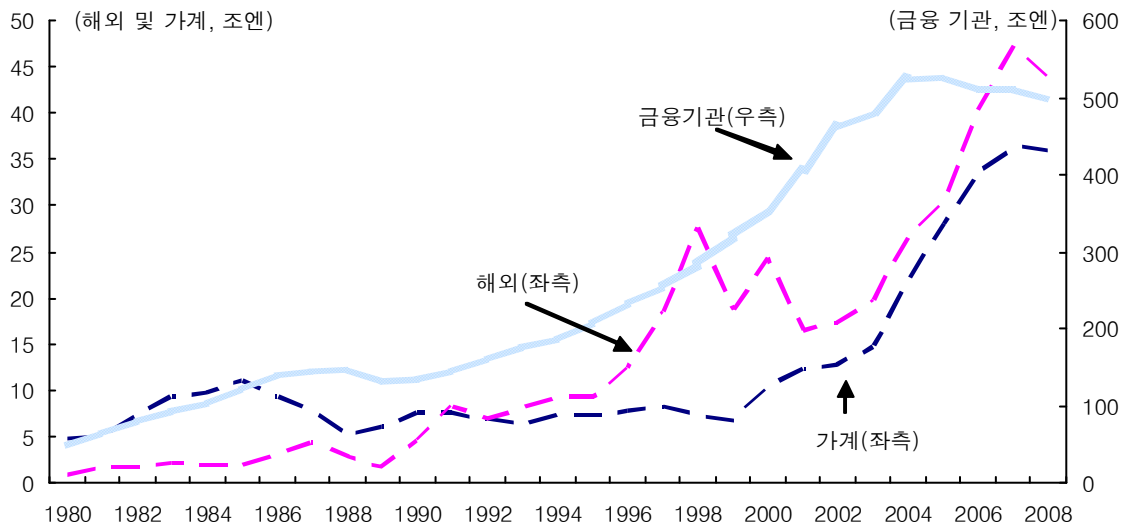
- 금융기관이 다량의 국채 보유

- 일본 국채 잔고<sup>13)</sup> 중 일본 금융기관<sup>14)</sup>의 보유액은 2005년 527조엔으로 전체의 82.9%까지 달했으며, 2008년 말 현재에도 500조엔으로 78.4%에 달함
- 이에 반해, 외국인 및 가계의 국채 보유 비율은 2004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2008년 말 현재 국채 보유 비율은 6.9%, 5.6%에 그침

-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 시장 불안정

- 일본 경기 부진 등으로 국채 발행이 늘거나 수요가 줄어들어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다량의 국채 보유 민간 금융 기관의 자본 구조를 악화시킬 것임<sup>15)</sup>

< 해외 및 가계 보유 국채 잔고 추이 >



자료 : 日本銀行.

주 : 금융기관의 잔고는 중앙은행, 예금취급기관(은행 등), 보험·연금기금, 금융중개기관(증권투자신탁, 년뱅크, 공적금융기관 등), 비중개형금융기관의 잔고합계임.

13) 국채 잔고는 일본은행의 국채와 재정용자채의 잔고합계임.

14) 금융기관의 잔고는 예금기관, 보험 등 금융 기관의 잔고합계임.

15) 深尾光洋의 계산에 따르면, 장기금리가 4% 전후로 상승하면 일본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중장기 채권의 약 10조엔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상당수의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日銀は『金融の量的緩和とインフレ・タ"-ゲット政策』を打ち出せ」, 週刊エコノミスト, 2001년 3월 13월호 참조 바람.

○ (지방재정의 파탄) 국가 재정 악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의존적인 재정구조로 인해 지방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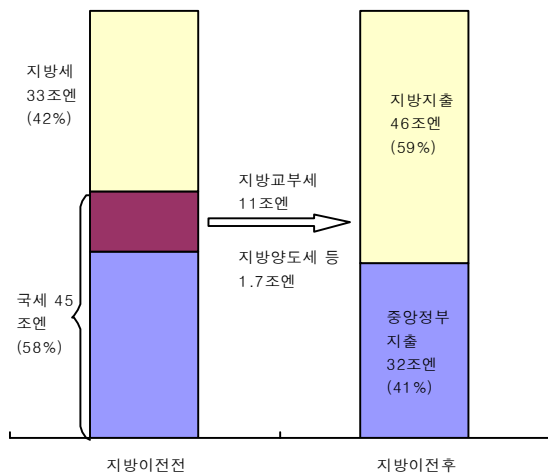
- 세수보다 많은 세출을 보이는 지방 재정 구조

- 일본의 지방 재정은 세출이 세수보다 많아 중앙 정부의 지방교부세, 지방양도세, 지방특별교부세 등에 의존하는 구조임
- 2003년 지방의 세입은 전체 세입 중 42%인 33조엔에 불과하지만, 세출은 전체 세출 중 59%인 46조엔에 달해 중앙정부의 의존적인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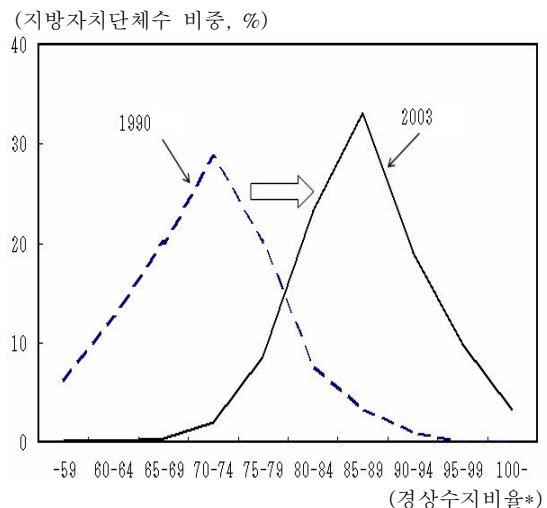
- 지방 재정의 악화

- 지방 재정은 인건비, 공채비 등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 특히 재정의 악화가 심화됨
- 일본 지방 자치 단체 712(도쿄도 23구포함)를 대상으로 한 경상수지비율은 1990년의 최빈치가 70~74%인데 반해, 2003년에는 85~89%로 전반적으로 악화
- 지방의 경상수지비율 평균은 2000년 86.4%까지 하락했으나, 2007년 현재 93.4%로 최고치를 기록함<sup>16)</sup>

< 지방의 세수 및 세출 구조 >



< 지방 재정 악화 >



자료 : 總務省自治財政局 「地方財政の狀況」, 『經濟財政白書』(2005)에서 재인용.

주 : \*경상수지 비율은 인건비와 공채비 등과 같이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를 매년 지방 자치단체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일반자원(지방세와 일반교부세 등으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높으면 재정 구조의 경직성이 심해져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됨.

16) 日本 總務省, 『地方財政白書』, 2009.

○ (세대간의 갈등 참여화) 재정 악화로 사회보장비 지출의 확대에 따른 수임 부담의 갭이 확대되어 세대간 갈등이 심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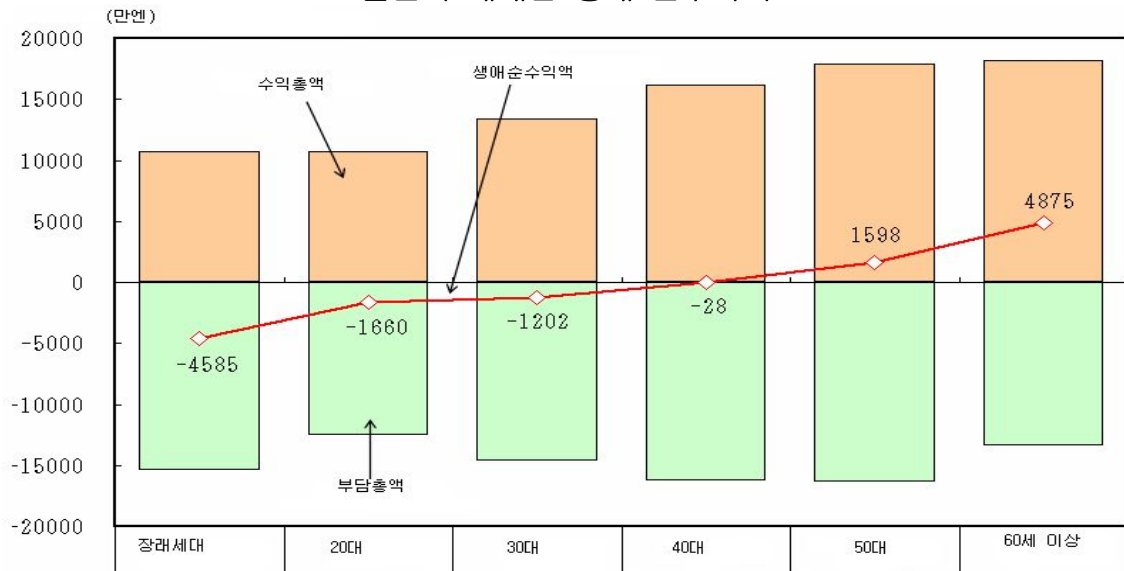
- 세대 간의 갈등 참여화

- 연금 급부를 줄이려는 세대와 혜택을 받으려는 세대 간의 갈등이 참여하게 나타나 사회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일본의 세대간 생애 순수익(수익총액-부담총액)액은 장래세대와 20대가 각각 -4,585만엔, -1,660만엔에 이르는 반면, 5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1,598만엔, 4,875만엔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의 초과 부담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인구구조의 변동에 따른 현역 세대의 경제적 부담 상승

- 단카이세대(일본전후세대)의 정년과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인구의 감소로 현역세대의 경제적 부담 가중
- 총무성의 자료<sup>17)</sup>에 따르면, 노년부양부담<sup>18)</sup>은 2000년 3.6명에서 2025년 1.8명으로 낮아져 2050년경에는 1.2명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의 세대간 생애 순수익액 >



자료 : 日本 內閣府, 『經濟財政白書』, 2005.

주 : 세대별 생애순수익액이란, 연령별로 분류한 각 세대의 생애에 걸친 사회보장금부와 행정서비스 등의 정부부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총액과 세 부담, 사회복지비 부담 등 정부부문에 대한 부담총액의 차액을 말함. 단, 2003년 현재 시점의 사회 제도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추산치임.

17) 日本 總務省, 「日本の將來推計人口」,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06.

18) 일본의 노년부양부담은 (20세-64세 인구/65세이상 인구)로 구함.

### 3. 시사점과 대응과제

#### 1) 시사점

○ 한국도 일본과 같이 국가 재정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 국가 채무의 급증

- 최근 한국의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997년 60조원에서 2009년 366조원(추정치)으로 6배 이상 급증하였고, GDP대비 비율은 12.3%에서 35.6%로 급증함
- 특히, 1998년 IMF 경제 위기 후 관리대상수지가 GDP대비 5.1%의 적자를 보인 이후 2009년에는 GDP대비 5.4%(추정치)로 최대 적자규모가 예상됨

##### - 사회복지비의 증가와 세대간 갈등

- 주요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는 작지만, 고령화 사회의 급진전으로 지출 규모의 급증이 예상되어 세대간 경제적 부담의 불공평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2001년 한국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48.4조원으로 GDP대비 7.8%였으나, 2005년 73.3조원으로 GDP대비 9.1%로 급증함
-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노령부양부담(15세-64세 생산가능인구/65세이상인구)은 2005년 7.94명에서 2030년에 2.65명까지 줄어들고, 2050년에는 1.39명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됨

##### -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

-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재정 지출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이루어짐
- 2009년 적자국채 순발행액은 35.5조원으로 사상 최대액이 되었고, 이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잔액은 63조원에서 98.5조원으로 급격히 증가됨

- 2009년의 적자국채 순발행액은 2000년대(2000~2008)의 연평균 발행규모인 4.8조원의 7.3배에 이르는 규모임
- 2009년 상반기 한국 국채의 투자자별 순매수 비중은 금융기관과 연기금/공제회가 각각 전체의 53.2%, 33.8%를 점함

#### - 감세로 인한 세수 축소

- 정부는 현행의 6~35%인 소득세율을 2010년부터 6~33%로 낮추고, 법인세율은 11~22%에서 10~20%로 내리는 감세정책을 추진할 방침임
- 경기 침체로 2009년에 11.2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sup>19)</sup>

#### - 지방 재정의 악화

- 지방세 등 세수의 부족으로 지방 재정의 자립도<sup>20)</sup>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음
- 지방 재정자립도는 2004년 57.2%에서 2009년 53.6%로 하락함
-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하락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립도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음
- 2009년 서울의 지방 재정자립도는 92.0%에 달하고 있으나, 전라남도는 19.4%에 불과해 지역간 격차가 심함

## 2) 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

- OECD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채무 수준 관리를 위해 목표치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가 채무의 규모와 관련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19) 동아일보, 2009.7.16 보도자료 참조.

20)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를 자치단체 예산규모로 나누어 100을 곱해서 얻어진 수치임. 부족분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당이 됨.

- **명시적인 중장기적 관리 목표 수준의 설정**
  - 국내 경기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확충, 복지수요 증대 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국가 재정 운용 목표를 설정
- **재정 운용의 효율성 증대**
  - 불요불급하며 시혜적인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
- **국가 세원 확충**
  - 중기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세수의 확충이 필요하며, 특히 국내 경제의 20%에 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지하 경제에 대한 세원 확보 노력 강화
- **국가 채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채 시장 육성<sup>21)</sup>**
  - 국가 채무의 대부분이 국채를 통해 조달되고 있어 국고채의 장내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채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
  - 국채의 탄력적인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채 시장의 차상환 방식을 개선
  - 국채시장의 유동성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채권 전자거래시스템이 개발되어 장외 딜러간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
-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재정 자립도 제고**
  - 지역특화 산업 육성,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 강화 등으로 지방자치체의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켜 나감
- **기업투자 증대를 통한 민간 경제 활성화**
  - 투자 여건의 지속적 개선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출 절약과 세수 증대로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

정유훈 선임연구원 (3669-4014, youhun@hri.co.kr)

21) 박형수 외, '경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9.4.

< 참고 문헌 >

- 박형수 외, '경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9.4.
- 현대경제연구원, '일본경제유동성합정의고훈', 「경제주평」 2009.2.9.
- 아사이 다카시 저, 신장철 역, 『2003년 일본국 파산』, 사람과책, 2001.
- 林宜嗣 『財政危機の經濟學』 日本評論社, 1997.
- 井堀利宏 『財政赤字の正しい考え方』 東洋經濟新報社, 2000.
- 深尾光洋 「日銀は『金融の量的緩和とインフレ・タ-ゲット政策』を打ち出せ」, 週刊エコノミスト, 2001년 3월 13일호.
- 日本經濟新聞社 『ゼミナ"-ル日本經濟入門2002年度版』.
- 日本 內閣府, 『經濟財政白書』, 各년도.
- 日本 國稅廳, 「民間給与實態統計調査」, www.nta.go.jp.
- 日本 總務省, 「日本の將來推計人口」,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06.
- , 『地方財政白書』, 2009.
- 增淵勝彦他(1995) 「第5次版EPA世界經濟モデル—基本構造と乘數分析—」 『經濟分析』 第139号、經濟企畫廳經濟研究所.
- 堀雅博他(1998) 「短期日本經濟マクロ計量モデルの構造とマクロ經濟政策の效果」 『經濟分析』 第157号、經濟企畫廳經濟研究所.
- 堀雅博他(2001) 「短期日本經濟マクロ計量モデル(2001年暫定版)の構造と乘數分析」 『ESRI Discussion Paper Series』 No.6、內閣府 經濟社會總合研究所.
- 堀雅博他(2004) 「短期日本經濟マクロ計量モデル(2003年版)の構造と乘數分析」 『經濟分析』 第172号、內閣府經濟社會總合研究所.
- 村田啓子他(2006) 「短期日本經濟マクロ計量モデル(2005年版)の構造と乘數分析」 『經濟分析』 第178号、內閣府 經濟社會總合研究所.
- 增淵勝彦他(2008) 「短期日本經濟マクロ計量モデル(2006年版)の構造と乘數分析」 『經濟分析』 第180号、內閣府 經濟社會總合研究所.
- 飛田史和他(2008) 「短期日本經濟マクロ計量モデル(2008年版)の構造と乘數分析」 『ESRI Discussion Paper Series』 No.201、內閣府 經濟社會總合研究所.
- OECD, *economic Outlook No. 85.*, 2009.
- Mankiw, N. Gregory., 『Principles of Economic』, 1999.(한국어판, 김경환 외 역, 『맨큐의 경제학』, (주)교보문고, 2001)

< 부록 > 일본의 거시경제계량모델과 정부지출승수

< 일본의 거시경제계량모델과 정부지출승수 >

	발표시기	추계기간	실질정부지출승수		
			1년차	2년차	3년차
세계경제모델 제1차판*	1981	1967-77	1.19	1.99	2.51
세계경제모델 제2차판*	1985	1966-82	1.11	1.62	1.84
세계경제모델 제3차판*	1987	1975-84	1.16	1.56	1.65
세계경제모델 제4차판*	1991	1979-88	1.33	1.57	1.63
세계경제모델 제5차판	1994	1983-92	1.24	1.40	1.40
계량위원회 5차*	1977	1960-72	1.81	3.29	3.66
계량위원회 6차*	1980	1965-76	1.50	1.57	1.25
계량위원회 8차*	1989	1970-84	1.18	1.50	1.56
계량위원회 10차	1996	1975-90	1.30	1.45	1.24
단기일본경제거시계량모델	1998	1985-97	1.21	1.31	1.24
단기일본경제거시계량모델(2001년판)	2001	1996-99	1.12	1.31	1.10
단기일본경제거시계량모델(2003년판)	2004	1999-2001	1.14	1.13	1.01
단기일본경제거시계량모델(2005년판)	2006	2001-2003	1.13	1.00	0.77
단기일본경제거시계량모델(2006년판)	2008	2002-2004	1.02	1.06	0.89
단기일본경제거시계량모델(2008년판)	2008	2003-2005	1.00	1.10	0.94

자료 : 堀雅博他 (1998) 「短期日本經濟マクロ計量モデルの構造とマクロ經濟政策の效果」 『經濟分析』 第157号、經濟企畫廳經濟研究所 및 短期日本經濟マクロ計量モデル의 각년도.  
 주 : \*는 실질GNP에 대한 승수이며, 나머지는 실질GDP에 대한 승수임.

주요 국내의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년				2009년		2009 (E)
				1/4	2/4	3/4	4/4	1/4	2/4	
미국	2.8	2.0	1.1	0.9	2.8	-0.5	-6.3	-5.7	-	-2.6
EU	2.9	2.7	0.8	0.6	-0.2	-0.2	-1.6	-2.5	-	-4.8
일본	2.0	2.3	-0.7	1.4	-3.5	-2.9	-13.5	-14.2	-	-6.0
중국	11.6	13.0	9.0	10.6	10.1	9.0	6.8	6.1	7.9	7.5
한국	5.2	5.1	2.2	5.5	4.3	3.1	-3.4	-4.2	-2.5	-3.0

주 1) : 2008년, 2009년 1/4분기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09년 전망치(E)는 IMF 2009년 7월 기준임.

2) :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구분	2007년 말	2008년 말	2009년				전주비
				3월말	6월말	7월 17일	7월 24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02	2.21	2.66	3.54	3.65	3.66	0.01%p
	엔/달러	112.58	90.22	97.34	96.14	94.27	95.10	0.825¥
	달러/유로	1.4722	1.4125	1.3190	1.4083	1.4129	1.4166	0.0037\$
	다우존스지수	13,265	8,776	7,609	8,447	8,744	9,069	325p
	닛케이지수	15,380	8,860	8,110	9,958	9,344	9,793	449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5.74	3.41	3.94	4.16	4.10	4.19	0.09%p
	원/달러	936.1	1,259.5	1,383.5	1,273.9	1,259.5	1,249.6	-9.9원
	코스피지수	1,897.1	1,124.5	1,206.3	1,390.1	1,440.1	1,502.6	62.5p

주 : 7월 24일 해외 지표는 전일(7월 23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구분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				전주비
				3월말	6월말	7월 17일	7월 24일	
국제 유가	WTI	95.97	44.61	49.65	69.08	63.63	65.83	2.20\$
	Dubai	89.30	36.45	46.80	71.85	63.19	65.75	2.56\$
CRB선물지수		358.71	229.54	220.40	249.96	245.05	251.27	6.22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